

‘토요일 오후 1시부터’ 비대면 진료·처방 가능

정부, 시범사업보완방안 시행
전남 17곳 ‘예외적 허용’ 선정
야간·휴일 등 약국 직접 수령
의료계 “약물 과다 처방 우려”

오는 15일부터 평일 오후 6시 이후, 토요일 오후 1시 이후 비대면 진료를 통한 약 처방 등이 가능해진다. 지역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 확대에 반발하며 ‘약물 남발이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5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이 시행된다.

먼저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허용 대상과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휴일과 야간에 만 18세 미만에 대해서만 비대면 진료로 상담만 가능했지만 15일부터는 연령에 관계없이 휴일과 야간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 기존에 상담만 하던 것에서 나아가 약 처방까지 허용된다.

비대면 진료 야간·휴일 기준은 가산 수가 적용 기준과 동일하다. 이에 따라 평일 오후 6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는 야간 진료에 해당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휴일 기준은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일요일까지다.

단, 비대면 진료와 처방을 받는다고 해서 비대면으로 약을 받을 수는 없다. 비대면 진료에서도 약 처방은 약국 방문이 원칙이다. 야간과 휴일에 비대면 진료를 받더라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약국은 약 2만 4700개가 있는데 평일 오후 8시 이후에도 운영하는 약국은 이 중 약 39%다.

광주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 1시까지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의 경우 지난해부터 5곳이 운영 중이다. 전남은 공공심야약국이 4곳(목포·여수·순천·광양)이다.

약 배송과 관련해서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데, 복지부는 향후 의약계, 전문가, 환자, 소비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해서 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를

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 최근 6개월 이내 의료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으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질환 구분 없이 의료진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만성질환자의 경우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서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다.

특히 이번 보완방안에서는 의료 취약지 기준을 기존 섬·벽지 지역에서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추가했다.

응급의료 취약약도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의 지역 내 분율을 의미하며, 이번 확대 적용 지역은 취약도 30% 이상인 전국 98개 시·군·구다.

전남에서는 강진, 고흥, 곡성, 구례, 나주, 담양, 무안, 보성, 신안, 영광, 영암, 완도, 장성, 장흥, 진도, 함평, 해남 등 17개 지역이 선정됐다.

비대면 진료 대상은 넓혔지만 모두가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의료 접근성 제고와 함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의사의 대면 진료 요구권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비대면 진료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의사가 대면 진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비대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의료법에 따른 진료 거부해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 비대면 진료를 진행했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 수가가 지급되고, 향후 환자가 실제로 내원을 하면 대면 진료 수가를 추가로 받게 된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관련 변경 사항에 대해 혼란이 없도록 의료 현장을 중심

으로 기준과 달라진 점에 대해 집중 홍보·안내할 예정이다.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지난 1일 의협이 입장문을 통해 비대면 진료와 관련 유감을 표명했다”면서 “광주지역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의료계 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휴일·야간 응급의료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비대면 진료가 되면 과도한 약 처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광주시민 93% “교권침해 심각, 구제제도 필요”

시의회 교육문화위, 여론조사

“교사 법률지원·학생 격리 필요”

광주시민 10명 중 9명은 교권 침해를 심각한 사회·교육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분석한 ‘교권강화 및 학생인권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18세 이상 시민 700명 중 651명(93%)은 ‘수업 방해·교사 조롱·폭행’ 등에 의한 교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심각성에 대해 50.3%가 ‘매우 그렇다’, 42.7%는 ‘그렇다’고 답했다. 가장 큰 문제인 교권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334명(44.7%)이 ‘학부모의 폭언과 폭행’을 제시했으며, 이어 ‘학생들의 폭언과 수업방해’ 281명(40.1%), ‘언론 등의 지나친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50명

(7.1%) 등이었다.

교권침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질문에는 225명(32.1%)이 ‘입시위주 교육에 의한 예절과 인성교육 소홀’을 지목했으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인한 학생인권 침해’ 165명(23.6%), ‘자녀 과잉보호’ 164명(23.4%), ‘법적 제도의 미비’ 143명(20.4%) 순이었다.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교사들에게 가장 필요하는 조치로는 243명(34.7%)이 ‘교권침해 교사를 위한 변호사 등의 법률지원’을 제시했다. 또 ‘가정 훈육 등을 위한 격리조치’에 응답한 시민은 207명(29.6%)이었으며, ‘학생 보호자 호출 및 귀가조치’ 162명(23.1%), ‘교사 휴식 및 병원진료 지원’ 75명(10.7%) 등으로 나타났다.

교권침해 학생이 중징계를 받았을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해 불이익을 주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637명(91%)이 찬성했으며 63명(9%)은 반대했다.

교권 침해 추가 처분 종류에 대해서는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가 248명(38.9%)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제전학’ 182명(28.6%), ‘출석정지’ 108명(17%), ‘학교봉사활동’ 74명(11.6%), ‘학급교체’ 13명(2%) 등의 순으로 많았다.

광주 학생인권조례에 의한 인권 보장에 대해서는 498명(71.1%)이 ‘보장받고 있다’에 응답했으며 202명(28.9%)은 ‘보장받고 있지 않다’에 답변했다.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침해 상관관계에 대한 질문에는 610명(87.1%)이 ‘영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90명(12.9%)으로 집계됐다.

신수정 교육문화위원장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해 많은 광주시민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원인과 사례가 다양한 만큼 학생인권 측면과 조화를 이루는 대책과 구제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은지 기자



서구새마을회 연탄봉사 광주서구새마을회 최덕환 회장과 협의회, 부녀회, 문교지도자, 대학새마을동아리 회원 등이 지난 1일 서구 유덕동 주택가 일대에서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저소득층 가정과 홀몸어르신 등 9세대(세대당 300장)에 2700장의 연탄을 배달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성육상 후보자 추천 바랍니다.

성육상은 (재)성육문화재단이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루어낸 인사를 표창함으로써 지역 인재들에게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조선 내화(주) 창업자 성육 이훈동선생의 유지를 기리기 위해 만든 상입니다. 각 분야의 훌륭한 분들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 상: 성육상 1명 (상패와 상금 5천만원)
- 시 상 부 문: 교육, 예술, 과학, 체육, 언론문화, 사회봉사
- 후보자자격: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출신자와 이 지역에서 5년이상 계속 거주자 또는 이에 해당되는 외국인, 각 부문 단체와 기관을 우선함.
- 후보자 추천자격
① 성육문화재단 임원
② 공공기관, 학술단체, 사회단체, 교육기관의 장
- 추천 서류
① 추천서(소정양식) ② 이력서 ③ 주민등록등본 ④ 업적증빙자료
- 접수기한: 2024년 1월 31일(수)
- 수상자 발표 및 시상일
- 발표: 2024년 2월
- 시상: 2024년 3월
- 서류제출 및 문의: 목포시 영산로 11(유달동 4-2)

(재)성육문화재단

전 화: 061-244-2527

홈페이지: <http://www.sungok.or.kr>

(접수된 자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해남 공항 해상풍력발전사업 변경사항 관련 주민의견 수렴 공고

- 발전소 명칭: 해남 공항 해상풍력발전사업
- 위 치: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무고리 인근 공유수면
- 면 적: 약 8㏊
- 발전사업의 주요 내용
-발전설비 용량: 240MW
-사업개시 예정일: 2026년 12월 이후 (계통연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사업운영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20년간 발전소 운영
- 발전사업 허가(변경) 신청자
가. 신청자: 비그림파워코리아(주)
나. 최대주주: 비그림파워퍼블릭리미티드 (B.Grimm Power Public Company Limited)
- 의견 제출 기간 및 방법
-의견 제출 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의견 제출 방법: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을 포함하여 자유 양식으로 우편 및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
① 우 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60번길 9, 3층 301-B호
② 전화/팩스: 전화 02-6249-8284 / 팩스 02-2135-2833
③ 전자메일: min.kang@bgrimpowerkorea.com
- 사업계획 열람: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장구리 583-13 (테크노밸리1로 53)

공고문 제 2023-6호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 2024년도 연구개발사업 과제별 연구책임자 공모(신문)

환경부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운영규정 제24조에 의거하여 2024년도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개발사업의 과제별 연구책임자(연구기관장 포함)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추진과제 (5건)

(표 1) 추진 연구제안서 목록

구분	No.	과 제 명	연구비(천원)
조사 연구	1	광주광역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자연환경조사 연구	25,000
	2	미생물막과 전극의 전기화학적 상호작용을 이용한 공극의 그린수소 생산기술 개발(연차과제)	30,000
	3	안전한 수자원 확보를 위한 AI 기반 물체이용 기술 최적화(연차과제)	30,000
	4	고도 폐수 처리 및 물 에너지 재이용을 극대화를 위한 수전해-압력지연식막중류(PRMD) 융합 공정 설계 및 타당성 평가	30,000
산학연	5	태양광-생물전기화학반응 시스템을 이용한 Zero-에너지 배터리 및 이차전지 공정 폐수 내 유기금속 처리 및 회수법 개발	40,000 (센터: 25,000 /기업: 15,000)

※ 연구과제 및 연구비는 행정협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연구기간: 2024. 4. ~ 2024. 11. (약 8개월)

※ 연구기간은 연구책임자 선정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기간: 2023. 12. 4.(월) ~ 12. 18.(월), 18:00 까지

4. 제출서류

○ 연구개발사업신청서 1부 (파일명: 연구책임자명.hwp)

※ 관련서식은 센터홈페이지 (www.gjgec.or.kr)에서 다운로드

5.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및 제한

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상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참조(자료실>센터규정>녹색환경지원센터 관련 규정, 2020년 3월 5일 기준)

나.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제한

※ 최근 3년간(2021~2023년) 2개 이상 18개 전국센터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으로 참여한 자는 연구책임자(연구원) 신청 불가

6. 신청서 작성방법

가. 연구개발사업계획(안) 제안서를 참고하여 작성
나. 연구비 계상 시 연구개발사업비 계상기준에 의거하여 작성
다. 산학연협력연구는 참여기업(제안서 참고)과 협의 후 제출

7. 제출방법 및 문의처

가. 제출방법: 이메일 (gjgec@hanmail.net): 제출기한 엄수) 또는 방문 접수

나. 접 수 처: (우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제1산학협력관 301호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

다. 문 의 처: (062)530-3991 연구지원담당자

2023년 12월 4일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장